

#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 The Impact of ESG in Local Governments on Net Youth Migration

김 경 현\*\*·서 성 민\*\*\*

Kyunghyun Kim·Seongmin Seo

### ■ 목 차 ■

- I. 서론
- II.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현황 및 선행연구
- III. 분석의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ESG, 청년인구, SDGs, K-SDGs

\*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2025년도 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지역 ESG의 현황과 시사점」의 실증분석 주제를 발전시킨 논문이며, 논문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당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발췌한 부분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5. 5. 12. 심사기간: 2025. 5. 12. ~ 2025. 6. 18. 게재확정일: 2025. 6. 18.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ains increasing attention, the importance of ESG-oriented administration has also grown. Younger generations tend to prioritize ESG in their consumption and employment choices, and these preferences may also influence their residential choi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mprovements in ESG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contribute to attracting net youth inflows, using 2023 local government ESG data and youth migration variables from 226 basic local governments. Our findings show that higher ESG scor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et youth migration. In particular, enhancements in the Social (S) dimension significantly drive youth inflows, with more pronounced effects in non-capital reg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engthening the social aspects of ESG in local governance may serve as an effective strategy to attract young populations and address regional demographic decline.

□ Keywords: Local Governments, ESG, Net Youth Migration, SDGs, K-SDGs

## I. 서론

ESG 경영이란 기업 경영 측면에서 환경(Environment, E), 사회(Social, S), 지배구조(Governance, 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4년 UN 보고서에서 등장한 이래 주로 민간 기업의 경영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KDI, 2021). 민간 부문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인식으로 그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 평가 체계 등이 확립된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공공 영역의 경우,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공공성 추구가 내재되기에, 공공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평가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비교적 주목도가 낮은 편이었다(김봉환·김지은, 2024). 그러나 UN이 국제적 약속으로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에 수립하여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설정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의 ESG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아주경제, 2022. 3. 6.; IT조선, 2022. 4. 13; 정원희·박범준, 2024).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ESG평가원은 2024년도부터 K-SDGs에 기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 행정 체계에서만큼은 최소한 외연적인 차원에서는 ESG 행정 목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구축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ESG 성과를 다루는 실증연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봉환·김지은, 2024). 본 연구는 한국ESG평가원이 발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증가가 청년인구 순유입 성과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ESG 행정의 성과를 인구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 인구 지역 정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경우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을 경험한 세대로서 환경과 기후변화, 사회 안정 등에 대한 관심이 타 세대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기

예(통계개발원, 2024),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등 거주지 이동 측면에서 ESG 환경을 중시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ESG의 성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청년의 지역 간 순이동 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요인을 다룬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관련 연구에서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증가가 청년 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ESG 항목 중에서 S 점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증가가 청년 인구 순유입에 특히나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ESG 행정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의 정주 경향이 높아지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역의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ESG 관련 연구 및 청년인구 순유입 결정 요인을 다루는 연구에 학술적 기여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현황 제시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기여점을 논의한다. 제 3장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단위 및 분석모형, 분석자료에 대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현황 및 선행연구

### 1. ESG에 대한 이론

지금까지 ESG 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민간 기업의 ESG 경영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민간 부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ESG 관련 연구 역시 확대되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ESG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위험이 낮아지고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armuji et al., 2016; Mervelskemper & Streit, 2017; Aouadi & Marsat, 2018; Dorfleitner et al., 2018;

Fatemi et al., 2018; Yu et al., 2018; Albuquerque et al., 2019; Giese et al., 2019; Qureshi et al., 2020).

한편, 평판이론(reputation theory)에 따르면 기업 평판은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간주되며(Wong & Zhang, 2022), 이는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이미지 구축 및 고객의 재구매 의사 제고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Meng-tao et al., 2023; Bagnoli & Watts, 2003; 전한탁 외, 2024).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ESG 경영은 평판관리 수단으로도 기능하며, 우수한 ESG 관행은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Xu et al., 2024). 즉, ESG 경영은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평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다.

이와 같은 민간 부문의 ESG 경영 동기와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지방정부 차원의 ESG 행정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내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서 ESG 행정을 수행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ESG 행정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 and 평판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비해, 공공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ESG 관련 논의가 미진한 편이었다. 이는 공공 부문이 본질적으로 공공성 추구라는 내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속가능성이나 ESG 가치가 이미 조직 운영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봉환·김지은, 2024).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 부문에서도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경영의 필요성과 그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학 및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ESG 경영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지연(2022), 김지환(2022), 정명재·유두호(2023) 등의 연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의 ESG 경영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김선임 외(2020), 황은진 외(2022), 정명재·유두호(2023)는 ESG 경영 도입이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및 사회적 책임 수행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공공 부문에서도 ESG 경영이 단순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한국 정부의 K-SDGs(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ESG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아주경제, 2022. 3. 6.; IT조선, 2022. 4. 13; 정원희·박범준, 2024). 지방자치단체의 ESG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채원호(2022)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ESG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ESG 적용 전략 사이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공무원 인식 제고와 교육, 관련 조직 신설 등의 요소가 그 우선순위임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ESG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한편 한병훈·박정호(2023)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실현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충분한 권한 및 예산, 인력, 정보 등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ESG 지방채 발행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ESG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ESG 노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회계 운영을 하여 회계 투명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을 분석한 김봉환·김지은(2024)의 연구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ESG가 도시 브랜드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함을 보인 국민성·이세규(2024)의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주제를 확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청년인구 측면에서 그 성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현황

UN이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한 이래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K-SDGs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 마다 수립하는 정부 계획으로, 제4차 계획기준 현재 17개 목표체계/119개 세부목표/236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업종·기업규모별 기업들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한편,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ESG 수준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ESG 행정 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ESG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4년 현재 79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ESG 관련 조례를 지정하여, 지역 차원의 ESG 제고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SG 관련 조례는 주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내 위치한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ESG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성과 평가,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ESG 관련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정리한 자치법규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ESG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관련 조례 지정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 수	3	41	35	79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3. 지방자치단체의 ESG 평가 체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ESG 행정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ESG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ESG 평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우선, 학계 차원에서는 정부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 목표와 지표 실태를 점검한 연구(이경한·김민준, 2025)와 지방자치단체의 ESG 관련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ESG 평가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정원희·박범준, 2024; 국민성·이세규, 2024; 임원혁·이세규, 2024). 다음으로, 전문 평가기관 차원에서는 ESG 행복경제연구소와 한국ESG평가원이 각각 2021년과 202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ESG평가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K-SDGs(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7개 목표체계/119개 세부목표/236개 지표 구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표평가(70%)와 정책평가(30%)를 혼합하여 평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ESG 환경과 ESG 행정을 위한 노력을 모두 반영한 지표의 특성을 가진다(한국ESG평가원, 2023). 여기서 지표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략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각 항목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며, 정책평가의 경우 ESG 추진 노력 등에 대해서 설문 및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한국ESG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체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한국ESG평가원의 평가 체계 발표 이후에도 지자체 ESG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ESG 업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관련 ESG 지표들 중에서 ESG 역량과 관련된 항목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지자체 ESG 성과를 분석한 연구(송건섭, 2025), 환경(E)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자체 ESG 평가에 에너지자립도 반영을 모색한 연구(박연숙 외, 2024), 통계청(KOSIS)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지자체 ESG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세규,

2024), 충청남도 사회지표 등 충청남도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정원희·박범준, 2024) 등이 그 예시이다.

선행 연구들은 기존의 ESG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연구 목적에 맞게 특정 ESG 영역에 가중치를 준 평가지표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ESG평가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체계 제시 이후 아직까지 당 평가 체계를 대체할 만한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ESG 지표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K-SDGs 체계를 따르고 있어 국제적 기준의 SDGs 체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는 한국ESG평가원의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표 2〉 한국ESG평가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체계

정 량 평 가	구분	전략목표	세부목표	측정지표
	환경(E)	기후변화 대응 및 관리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14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폐기물 재활용 노력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청정에너지 공급증대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수자원 효율적 사용	
	생태계 보전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사회(S)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출산율 제고	23개
			다양한 육아 지원 노력	
			인구 확대 노력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유치 성과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	
		공공복지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고령화 사회 대응	노인 복지 확대	
			다양한 고령화 사회 대응 노력	
불평등 해소		성평등 보장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교육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지배구조(G)	건전한 지방 재정	지방 재정 건전화	4개	
	민주적인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		
	청렴도 제고	청렴도 제고 및 부패 수준 저하		
정 성 평 가	- ESG 각 부문별 전담 조직 유무 - ESG 관련 교육 시행 여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여부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여부 등			

출처: 한국ESG평가원(2023)



#### 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순유입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ESG가 청년인구 순유입 성과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청년인구 순유입 결정 요인에 대해서 다루어 왔으며, 기존 연구들은 그 요인들로 1) 좋은 일자리 요인, 2) 공공재 공급 요인, 3) 정책적 요인, 4) 재정지출 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년들이 취업기회, 높은 소득의 기회를 찾아서 지역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의 임금수준, 사업체 규모, 사업체 수,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제조업 기반, 첨단산업 환경 등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환경이 청년 인구 유입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김기승·정민수, 2013; 이찬영·문체철, 2016; 권자경·백정미, 2018; 이찬영, 2018; 김유현, 2021; 문영만, 2022; 김민석·강민규, 2023; 임태경, 2023b; 차건환·임수하, 2023; 이석환, 2024; 임태경, 2024a).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지역 이동성이 강하며, 특히 고용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년 인구 유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재 공급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학 등 상급 교육기관의 존재(이상욱 외, 2019), 문화·예술 시설(이찬영, 2018; 이지은·이경은, 2020; 김동신, 2021), 보건 및 의료시설(김동신, 2021; 김화연·이대웅, 2022) 등의 공공재 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청년인구 유입이 많음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공공재 공급을 다루는 일부 연구들에서는 청년층을 20대와 30대로 나누어서 20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요인이 더 중요하나 30대의 경우 공공재 공급 요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한다.

정책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효과로서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강유미, 2022; 김화연·이대웅, 2022; 최선·이정은, 2022; 임소현 외, 2024)과 혁신도시 정책과 같은 정부주도 대규모 비수도권 개발 프로젝트가 청년인구 유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임태경, 2021b; 임태경, 2023a),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진 청년사업이 청년층의 체류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임태경, 2024b)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청년지원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제정 자체가 청년 유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인지도(혹은 이용 경험) 상승은 청년층의 지역 정주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청년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증가하는 경우 청년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지방소

멸대응기금을 통한 청년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청년체류 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가 청년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임태경(2022)의 연구가 있으며, 당 연구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 등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서 지출된 세출액과 사회복지비 영역의 세출액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행정비에서의 세출액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순유입 관련 선행연구

결정요인	세부 요인	주요 연구 내용	선행연구
좋은 일자리 요인	임금수준, 사업체 규모, 사업체 수, 고용 안정성, 제조업 기반, 첨단산업 환경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지역 이동성이 강하며, 임금수준, 사업체 규모, 사업체 수, 고용 안정성, 제조업 기반, 첨단산업 환경 등 지역의 일자리 여건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	김기승·정민수(2013), 이찬영·문제철(2016), 권자경·백정미(2018), 이찬영(2018), 김유현(2021), 문영만(2022), 김민석·강민규(2023), 임태경(2023b, 2024a), 차건환·임수하(2023), 이석환(2024),
공공재 공급 요인	상급 교육기관, 문화·예술 시설, 보건 및 의료시설 등의 공공재 기반	공공재 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유입이 많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요인이 더 중요하나 30대의 경우 공공재 공급 요인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	이상욱 외(2019), 이찬영(2018), 이지은·이정은(2020), 김동신(2021), 김화연·이대웅(2022)
정책적 요인	자치법규, 청년정책	자치법규 제정 자체보다는 청년정책 만족도·인지도와 청년 정책 및 예산 집행 증가가 청년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강유미(2022), 김화연·이대웅(2022), 최선·이정은(2022), 임소현 외(2024)
	혁신도시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청년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체류 증가에 효과적으로 작용함.	임태경(2021b, 2023a, 2024b)
재정 지출 요인	투자적지출, 사회복지비지출, 일반행정비지출	투자적 성격의 세출액(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 등)과 사회복지비 영역의 세출액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행정비에서의 세출액은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임태경(2022)

이상의 연구들은 청년인구 순유입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청년인구 유입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체류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정책이 정책 목표로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임태경, 2024b), 청년 인구 유입은 인구 측면에서 인구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임태경, 2021a), 청년인구 순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ESG라는 차별화된 주제로서 관련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년인구 순유입 결정요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ESG 요인을 다루고 있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환경과 기후변화, 사회 안정 등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는데(통계개발원, 2024),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에 지역의 ESG 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기존의 경영학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연구된 청년세대(MZ세대)의 ESG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의 ESG 활동은 청년층의 소비 및 소비자 반응, 소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강윤지·김상훈, 2022; 이도형, 2022; 이현진·김수진, 2023; 정예지 외, 2023; 김민주, 2024; 지현서 외, 2025), 이는 청년세대가 ESG의 가치에 대해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유기업원(2021)의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은 상품 구매 시에 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소비를 하며, 입사 지원을 할 시에도 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sup> 이상의 정보들을 종합할 때, 청년들은 지역 이동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ESG 환경을 고려할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이슈를 다루는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측면에서 정책적·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자유기업원에서 2020. 11. 26.~2020. 12. 11. 동안 전국 천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해당 조사에서 “상품 구매 시 모든 조건가격 포함이 동일할 때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음에 87% 청년들이 ‘예’로 응답을 하였으며, “만약,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상품이 환경비용 등의 이유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상품보다 비싸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입사 지원을 할 경우 지원하는 기업의 관련 이슈를 고려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에는 각각 60.9%와 78.4%의 청년들이 ‘예’로 응답을 하였다.

### Ⅲ. 분석의 방법

#### 1. 분석단위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시점은 독립변수인 ESG 점수의 경우 2022년(혹은 2021년)이며, 이는 한국ESG평가원의 가용한 ESG평가 점수 데이터가 2023년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는 2022년 말(또는 ESG 점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따라 2021년 말)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의 경우도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2022년 혹은 그 이전 시점의 자료를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순유입 데이터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 시차를 고려하여 ESG 데이터 및 통제변수의 시점보다 한 시점 후인 2023년도의 순이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 식(1)과 같은 회귀분석식을 설정하였다.

$$y_i = \beta_0 + \gamma \cdot ESG\text{점수}_i + X_i \cdot \beta_1 + \epsilon_i \quad (1)$$

위 식에서  $i$ 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며,  $y$ 는 종속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i$ )의 2023년도 시점의 전체 인구 순이동, 청년 인구 순이동(19~39세), 청년 인구 순이동(19~34세)을 사용한다. ESG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22년(2021년) 시점의 ESG 환경을 점수화한 지표로, ESG, E, S, G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당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  $\hat{\gamma}$ 가 당 분석에서의 주요 관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추정치이다.  $\epsilon_i$ 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표준오차로는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X$ )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 일반예산, 일반예산<sup>2</sup>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는 각각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을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한 후, 도출된 제1주성분을 바탕으로 생성된 변수들이다.

PCA는 다변수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1개의 변수로 축약하는 변수 축약법으로, 서로 연

관성이 존재하는 고차원 공간 표본에 대해 직교 변환을 통해 선형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주 성분(저차원 공간) 표본으로 변환을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PCA를 사용하면 데이터 공간에 있는 점들에 대하여 분산을 가장 크게 보존되는 축(주성분)을 통하여 차원을 축소되는 방식으로 다변수 정보가 축약된다. 여기서 제1 주성분은 데이터 공간의 점들에 대하여 사상(projection)하였을 때 분산이 가장 크게 되는 축에 해당하며, 제2 주성분은 제1주성분에 해당되는 데이터 축과 직교(orthogonal)하면서 해당 점들에 대한 분산을 가장 크게 사상하는 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직교변환을 할 때 각 변수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변량(variation)에 대한 각 변수의 분산에 대한 상대적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 이처럼 PCA는 통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지수(index)가 만들어지는 장점을 가지기에 사전적으로 변수 간 중요도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 다변수 정보를 이용한 지수를 만들 때 널리 활용된다.

PCA의 원리를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  $X' = [x_1, x_2, x_3, \dots, x_n]$ 가  $\lambda_1 \geq \lambda_2 \geq \dots \geq \lambda_n \geq 0$ 의 고유치(eigenvalues)를 가지는 분산-공분산 행렬  $\Sigma$ 을 가진다고 하자. 여기서  $l'l = 1$ 을 만족하는 특성벡터  $l$ 을 가지고 아래 식(2)와 같은 선형변환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P_1 &= l_1 X = l_{11}x_1 + l_{12}x_2 + \dots + l_{1n}x_n \\ P_2 &= l_2 X = l_{21}x_1 + l_{22}x_2 + \dots + l_{2n}x_n \\ &\vdots \\ P_n &= l_n X = l_{n1}x_1 + l_{n2}x_2 + \dots + l_{nn}x_n \end{aligned} \quad (2)$$

위 식(2)의 선형변환을 통해서 도출된  $P_1, P_2, \dots, P_n$ 을 확률변수  $x_1, x_2, \dots, x_n$ 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이라고 하고,  $n$ 개의 주성분은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이  $Var(P_i) = l_i' \Sigma l_i$  (여기서  $i = 1, 2, \dots, n$ ), 공분산이  $Cov(P_i, P_k) = l_i' \Sigma l_k$  (여기서  $i, k = 1, 2, \dots, n$ )인 특징을 가진다. 새롭게 생성된 주성분들 간에는 서로 독립이며 원래 변수와는 선형결합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은 각각  $X'$ 에 대한 축약된 정보를 나타내지만, 제1 주성분이 나타내는 정보와 제2 주성분이 나타내는 정보는  $X'$ 에 관한 서로 다른 측면 정보를 내포한다. 보통 제2주성분은 제1주성분에 비해 전체 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이 낮고, 일반적으로 제1, 2주성분만으로 데이터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최대 2개 주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관측치는 226개로, 각 지수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직접 사용할 경우 관측치에 비해서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s)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낮아지고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이 낮아지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수에 내포해 있는 정보를 1개의 변수로 축약하는 방법인 PCA를 사용하여 도출된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2023년도의 전체 인구 순이동, 청년 인구 순이동(19~39세), 청년 인구 순이동(19~34세)으로, 해당 변수들은 통계청 KOSIS 사이트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로 수집하였다. 여기서 인구 순이동은 해당 년도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명)로 집계되며, 인구 순이동이 양(+)이면 인구의 순유입을 나타내며, 음(-)이면 인구 순유출을 나타낸다. 청년인구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만 19~39세와 19~34세 두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만 19~39세는 다수의 특·광역시 상의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에 해당하며, 19~34세는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 연령 정의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항은 종속변수의 분석시점(2023년)을 고려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3년보다 이전 시점에 수집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ESG, E, S, G 점수는 한국ESG평가원이 발표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평가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한국ESG평가원, 2023). 해당 자료는 매년 한국ESG평가원이 전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를 보고하는 자료로, E, S, G 각 항목의 평가지표는 <표 2>와 같으며, 자료의 시점은 2022년도 말(일부 평가 지표의 경우 자료 가용성으로 인하여 2021년도 말) 기준이다.

해당 자료는 K-SDGs 체계를 따라 평가 항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의 SDGs 체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로 판단된다. 당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점수는 S, A+, A, B+, B, C+, C 등급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구간 값으로만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간 값의 중간값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ESG 점수를 수치화하였고, 결과적으로 각 구간 간에는 5점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ESG 각 점수에 대한 변수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여러 변수들을 PCA를 통해 축약한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를 사용하였다. 각 지수를 도출할 때 각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들 간의 규모(scale)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PCA를 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을 표준화(standardize)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도출하는 것으로, 그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인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청년 인구 순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구성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변수들을 수집하였고, 변수 성격에 따라 경제, 인력, 혁신, 인프라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분류된 각 항목들마다 PCA를 실시하여 제 1주성분을 도출하여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를 생성하였다. 각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변수들은 여러 출처들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인구 변수의 시점(2023년) 보다 이전 시점 기간(2020~2022년)으로 해당 변수들의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수집하였다. 각 변수들의 분석 시점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청년 인구 순유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 일반예산<sup>2</sup>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의 자료 출처는 통계청 KOSIS이며, 변수 시점은 2021년이다.

<표 4> PCA에 사용된 각 지수 항목별 세부 변수에 대한 설명

항목	변수	비고	시점	자료
경제 지수	인구당GRDP	GRDP를 인구수로 나눈 값	2020	통계청 경제총조사
	제조업경상연구개발비	제조업 경상연구개발비를 총인구로 나눈 값	2020	통계청 경제총조사
	제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 부가가치를 사업체 종사자수로 나눈 값	2020	통계청 경제총조사
인력 지수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로 집계	202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용근로자비중	상용근로자수를 종사자수로 나눈 값	202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고학력인구비중	15세 이상 인구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인구의 비중(%)	2020	통계청
혁신 지수	인구당특허수	특허출원건수를 인구 수로 나눈 값	최근3개년 (2022)	특허청
	지식기반 산업종사자수	산업연구원(2022)이 분류한 지식기반산업 코드로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를 집계한 값	202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인프라 지수	교통망접근성	고속도로IC까지의 거리와 고속철도 역까지 거리의 평균값(km)	2022	국토정보플랫폼
	노후주택비율	전체 주택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중(%)	2022	국토정보플랫폼
	병원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행정구역 내의 총 거주인구수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권역(1.5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수의 비중(%)	2022	국토정보플랫폼
	문화기반시설수	시군구 내에 존재하는 문화기반시설수	2022	통계청

## IV. 분석 결과

### 1. 기초 분석

#### 1) 주성분 분석(PCA) 결과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경제지수,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 생성을 위해 실시한 주성분 분석(PCA)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PCA로 도출된 지수(제 1주성분)는 다변수의 정보를 1개의 정보로 축약한 지수로, 그 지수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도출된 지수의 속성은 각 지수를 생성하는데 사용하였던 개별 변수들과 각 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각 지수들과 그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경제지수는 인구당GRDP, 제조업경상연구개발비, 제조업노동생산성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수로, 경제지수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 부가가치와 생산성, 연구개발 역량은 높아지는 성격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력지수는 종사자수, 상용근로자비중, 고학력인구비중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수로, 인력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고용 수준과 고용의 질, 고용 스킬(학력) 수준은 높아지는 성격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지수의 경우 인구당특허수, 지식기반산업종사자수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수로, 혁신지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혁신 성과와 혁신 잠재력은 높아지는 성격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지수는 교통망접근성, 노후주택비율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병원서비스권역내인구비율, 문화기반시설수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교통망접근성 변수는 그 수치가 클수록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변수이며, 노후주택비율 변수는 그 수치가 클수록 지역의 주택 질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프라지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의 교통 기반과 주택 수준은 낮아지는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원서비스권역내인구비율과 문화기반시설수는 각각 그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의료보건 환경이 양호하고 문화기반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 해당 변수들과 인프라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의료보건 환경과 문화기반수준이 낮아지는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주성분 분석(PCA) 결과

	경제지수				
	상관계수	Mean	Std. dev	Min	Max
인구당GRDP	0.666	42.633	40.30	9.23	500.76
제조업경상연구개발비	0.714	0.468	1.88	0.00	23.31
제조업노동생산성	0.780	132.558	85.64	0.00	663.44
	인력지수				
	상관계수	Mean	Std. dev	Min	Max
종사자수	0.894	108,200	116,796.40	4,600	799,527
상용근로자비중	0.750	0.604	0.07	0.46	0.80
고학력인구비중	0.833	27.959	11.20	11.74	69.57
	혁신지수				
	상관계수	Mean	Std. dev	Min	Max
인구당특허수	0.895	27.182	38.22	3.24	325.06
지식기반산업종사자수	0.895	20,942.9	33,452.78	203	264,259
	인프라지수				
	상관계수	Mean	Std. dev	Min	Max
교통망접근성	0.83	20.39	15.0	0	76.50
노후주택비율	0.7326	30.63	13.5	3.69	68.86
병원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7378	35.56	25.9	0	100
문화기반시설수	-0.5116	13.69	10.4	1	70

## 2)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6〉과 같다. 분석에 활용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전체 인구 순이동, 청년 인구 순이동(19-39세), 청년 인구 순이동(19-34세) 변수의 평균은 각각 -0.01, 2.41, 4.54로, 평균 값에 비해 각 변수들의 최대/최소값과 표준편차는 상당히 큰 값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미루어볼 때 각 지역별 인구 순이동의 편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ESG 점수와 E, S, G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집계되는 점수이며, 앞서 설명하였듯이 원자료가 구간 값으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구간 값의 중간값으로 점수가 코딩되어 변수 값의 분포는 52~82점으로 분포를 한다. 각 점수들의 평균은 대략

60점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제지수와 인력지수, 혁신지수, 인프라지수는 PCA를 통해 지수화된 변수들로, 해당 지수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표준화한 상태에서 PCA를 통해 생성된 변수들이므로 해당 지수들에 서의 값은 각 영역(경제, 인력, 혁신, 인프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상대적인 위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분석에 사용된 변수 요약통계량

Category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인구 변수	전체 인구 순이동	226	-0.01	4,811.06	-12,578	34,410
	청년 인구 순이동 (19-39세)	226	2.41	2,302.86	-6,189	16,155
	청년 인구 순이동 (19-34세)	226	4.54	1,864.96	-5,041	12,670
ESG 변수	ESG점수	226	61.12	4.68	52	77
	E점수	226	63.70	8.25	52	82
	S점수	226	60.08	7.90	52	77
	G점수	226	62.20	9.24	52	82
기타 통제변수	경제지수	226	0.001	1.257	-1.401	8.793
	인력지수	226	-0.010	1.435	-2.099	7.113
	혁신지수	226	0.002	1.273	-0.874	7.461
	인프라지수	226	0.015	1.423	-2.555	3.919
	일반예산(십억원)	226	918.0	575.9	215.8	3,570.2

1) 인구 변수의 자료 출처는 통계청 KOSIS, 2) ESG 변수의 자료 출처는 한국ESG평가원, 3) 일반예산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 KOSIS, 4) 나머지 기타 통제변수의 자료 출처는 〈표 4〉 참조

## 2.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 1) ESG와 전체 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ESG가 전체 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식(1)을 사용하여 추정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SG 점수의 추정 계수가 양(+)으로 도출되기는 하나, 일반예산규모만 통제한 (2)열 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모든 통제 변수를 통제한 (1)열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

지 않았다. 그 분석 결과는 전체 인구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ESG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 유입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결론 짓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ESG와 전체 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종속변수	전체 인구 순이동		
	(1)	(2)	(3)
ESG점수	141.2 (102.5)	192.3* (111.2)	186.9 (116.3)
경제지수	516.3 (476.0)		
인력지수	227.1 (535.2)		
혁신지수	747.0 (600.1)		
인프라지수	193.1 (382.6)		
일반예산	0.584 (2.434)	1.075 (2.153)	
일반예산 <sup>2</sup>	-0.000461 (0.000789)	-0.000308 (0.000723)	
Observations	226	226	226
R-squared	0.153	0.084	0.083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 2)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세대와는 달리 청년 세대의 경우 ESG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 요소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세대는 타 세대에 비해 지역 선택 시 지역의 ESG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식(1)을 사용하여 청년 인구 순이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ESG점수의 계수 추정치는 양(+)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모든 통제변수들을 적용한 (1)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 1점 증가는 19~39세 청년 인구 순이동을 89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또한 (4)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 1점 증가는 19~34세 청년 인구 순이동을 82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그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수준이 전체 인구 순이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나 청년 인구 순이동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적어도 청년 인구를 지역에 유입 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질 때,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ESG 환경 개선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인구 유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임태경, 2021),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ESG 환경 개선은 향후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종속변수	19~39세 인구 순이동			19~34세 인구 순이동		
	(1)	(2)	(3)	(4)	(5)	(6)
ESG점수	88.99* (46.60)	117.5** (53.35)	122.0** (57.42)	81.85** (36.18)	105.0** (41.85)	109.5** (45.09)
경제지수	191.8 (239.4)			135.5 (182.2)		
인력지수	188.7 (231.3)			38.26 (179.6)		
혁신지수	475.9** (236.2)			462.5*** (172.1)		
인프라지수	75.90 (163.6)			28.42 (128.2)		
일반예산	-1.024 (1.176)	-0.689 (1.089)		-0.971 (0.934)	-0.754 (0.876)	
일반예산 <sup>2</sup>	0.000134 (0.000408)	0.000241 (0.000404)		0.000154 (0.000334)	0.000245 (0.000338)	
Observations	226	226	226	226	226	226
R-squared	0.241	0.143	0.139	0.309	0.219	0.214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 3) E, S, G와 청년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앞서 분석에서는 청년 인구 순유입의 결정요인으로서 ESG 점수 총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추가 분석으로 E, S, G 중에서 어느 요인이 청년 인구 순유입의 결정요인으로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 S, G 각 점수에 대해 식(1)을 사용하여 청년인구 순유입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E, S, G 점수 중에서 S점수 증가가 청년 인구 순유입 증가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점수의 1점 증가는 19~39세 인구 순이동을 54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수준에서 유의미, (2)열 참조), 19~39세 인구 순이동은 5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수준에서 유의미, (5)열 참조). S점수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불평등 해소, 교육 등의 전략목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표 2> 참조), ESG 요인들 중에서 해당 항목들이 청년 인구 유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정책 수립 시 특히나 이러한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E, S, G와 청년인구 순유입 분석 결과

종속변수	19~39세 인구 순이동			19~34세 인구 순이동		
	(1)	(2)	(3)	(4)	(5)	(6)
E점수	0.736 (26.89)			5.831 (20.00)		
S점수		54.02** (26.49)			50.02** (20.15)	
G점수			-2.161 (19.37)			-0.669 (14.95)
경제지수	200.0 (264.0)	142.1 (233.3)	198.6 (251.5)	149.1 (202.8)	89.38 (178.1)	142.0 (193.2)
인력지수	172.1 (240.9)	268.7 (250.2)	174.8 (235.1)	15.38 (188.4)	112.5 (195.8)	24.55 (184.5)
혁신지수	560.6** (236.4)	474.7** (240.5)	560.9** (235.0)	538.3*** (175.0)	460.8** (180.6)	540.7*** (175.5)
인프라지수	158.3 (186.5)	43.49 (165.9)	159.8 (179.8)	105.2 (146.9)	-2.109 (129.1)	104.6 (142.3)
일반예산	-1.140 (1.210)	-1.152 (1.212)	-1.147 (1.205)	-1.072 (0.964)	-1.089 (0.962)	-1.081 (0.960)
일반예산 <sup>2</sup>	0.000186 (0.000422)	0.000180 (0.000424)	0.000188 (0.000420)	0.000197 (0.000347)	0.000196 (0.000347)	0.000202 (0.000345)
Observations	226	226	226	226	226	226
R-squared	0.217	0.231	0.217	0.278	0.296	0.277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 4) 하위표본 분석 결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산업적 특성 등의 이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주로 지방소멸 문제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지역 표본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눈 하위표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수도권/비수도권 시군구 표본을 사용하여 식(1)을 추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하위표본 분석 결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19~39세 인구 순이동	19~34세 인구 순이동	19~39세 인구 순이동	19~34세 인구 순이동
종속변수	(1)	(2)	(3)	(4)
ESG점수	149.4 (132.7)	156.3 (98.62)	35.89* (19.06)	30.08* (15.43)
경제지수	377.5 (505.4)	272.7 (388.6)	163.4 (162.0)	105.5 (107.6)
인력지수	573.4* (327.3)	276.3 (271.1)	-138.1 (219.6)	-122.2 (168.1)
혁신지수	-42.44 (360.1)	58.30 (311.1)	784.3** (320.4)	723.5*** (187.8)
인프라지수	90.73 (379.5)	-8.671 (310.6)	-63.83 (119.0)	-19.53 (94.77)
일반예산	0.732 (3.295)	-0.0441 (2.437)	-1.371 (0.850)	-1.192* (0.714)
일반예산 <sup>2</sup>	-4.81e-05 (0.000882)	0.000136 (0.000656)	-2.84e-05 (0.000325)	-1.29e-05 (0.000279)
Observations	66	66	160	160
R-squared	0.229	0.276	0.341	0.376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이분산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3)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도권의 경우 비록 ESG 점수 계수가 양(+)이며, 추정치의 규모(magnitude)는 큰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ESG 점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으로 추정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점수 1점 증가는 19~39세 인구 순이동을 36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수준에서 유의미), 19~34세 인구 순이동은 3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수준에서 유의미).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ESG 환경 개선이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권역 간의 인구·산업적 특성 등의 이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권역별 하위표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다만, 당 결과는 각 하위표본의 관측치가 50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당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면상 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해당 분석 결과 강원권에서 ESG 점수와 19~39세 인구 순이동 및 19~34세 인구 순이동 간의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도출되었다(각각 10%, 5% 수준에서 유의).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기초지자체가 다수 속해있는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을 통한 ESG 환경 개선이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자체의 ESG 환경은 전체 인구 순이동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나, 청년 인구 순이동과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S(사회) 항목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K-SDGs를 위한 목적에서 지역 ESG 환경 제고를 접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ESG 환경 제고를 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지역 ESG 환경 제고 정책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ESG 환경 제고를 위한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지역 ESG 환경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가용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 항목의 구성 및 낮은 사업예산 집행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 2024. 5. 10.).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K-SDGs 이행을 위한 지역 ESG 환경 제고 정책이 공통되는 정책 목표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해당 정책들에 대한 통합 운영은 지방행정 차원에서 의미있는 제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하위 표본 분석에서 나타난 이질적인 결과는,

2) 각 권역별 구성 및 분석표본의 관측치는 다음과 같다: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31), 강원권(강원; 18),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41), 영남권(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70).

지역 ESG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ESG 수준이 청년 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ESG 개선이 청년 인구 유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ESG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인구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ESG와 청년 인구 유입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이 일반적으로 시·군·구 단위보다 넓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직장과 거주지의 불일치, 문화·교육·소비·자연환경의 이용 범위가 시·군·구를 넘어서는 경향 등으로 인해 분석 단위의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수도권과 같은 광역 생활권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보다 넓은 노동시장권이나 지역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ESG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군·구와 생활권이 대체로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시·군·구 단위가 여전히 효과적인 행정 단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UN이 국제적 약속으로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 수립하여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설정된 상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목표를 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 등 지속가능 발전 실현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ESG 행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청년 인구 순유입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ESG는 그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의 지속성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공공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는 ESG 행정 수준이 높은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역의 청년 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ESG점수를 E, S, G 각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S점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ESG 항목 중에서 S 항목을 개선하는 방향의 대응 전략이 지역의 청년 정주를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한 하위표본 분석에서는 비수도권 표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를 늘리는데 ESG 행정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서 ESG의 가치를 중시하며, 소비·일자리 측면에서도 ESG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ESG에 대한 높은 가중치는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ESG 항목 중에서 청년 인구 순유입에 특히나 유의한 항목으로 작용하였던 S에 해당하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불평등 해소, 교육 등의 전략목표 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기울일 경우 청년 인구 유입 성과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ESG와 청년 인구 유입 간의 관계에서 이질적인 양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ESG 수준이 청년 인구 순유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발견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정책이 인구소멸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계수 부호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시·군·구보다 넓은 생활권 특성에 기인한 분석 단위의 한계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 시, 비수도권은 시·군·구 단위 기반의 정책 접근이 효과적인 반면, 수도권은 광역 생활권 단위에 기반한 ESG 정책 추진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 노력이 지역 인구 유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 그리고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ESG관련 연구 및 인구 유입 결정 요인을 다루는 경제학·경영학·행정학 연구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관련한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 환류체계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관련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ESG 성과를 다루는 학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유미. (2022).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지향이 청년 이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5: 25-53.
- 강윤지·김상훈. (2022).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MZ 세대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33(3): 7-39.
- 관계부처합동. (20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 국인성·이세규. (2024). ESG 도시계획이 도시브랜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6(5): 1-20.
- 권자경·백정미. (2018).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방안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강릉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1): 111-136.
- 김기승·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103-130.
- 김동신. (2021).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21(2): 177-205.
- 김민석·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6(2): 47-66.
- 김민주. (2024). 항공사 ESG 경영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MZ 세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2(4): 29-52.
- 김봉환·김지은. (2024). 지방자치단체의 ESG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62(2): 69-99.
- 김선임·윤정용·손세도·이헌상. (2020).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재무요인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3(4): 1283-1303.
- 김유현. (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 김지연. (2022). 지방 출연기관의 ESG 경영 추진방안 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연구」, 22(3): 173-190.
- 김지환. (2022). 경기도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현황과 과제. 「환경경영연구」, 14: 13-30.
- 김화연·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나라살림연구소. (2024. 5. 10.).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먼 돈인가. <https://narasallim.net/>

- project/1431?spage=1 (최종접속일: 2025. 6. 11.).
- 문영만. (2022).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7 개 권역과 노동시장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0(4): 55-77.
- 박연숙·양세훈·장재욱. (2024). 지방정부 ESG 진단 항목 지표개선 연구: '에너지자립도'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8(4): 255-278.
- 산업연구원. (2022). 「지역통계 핸드북」.
- 송건섭. (2025). 인구 4 만 지역의 ESG 경영 효율성 평가와 전략: 18 개 자치군을 중심으로. 「한국 비교정부학보」, 29(1): 109-132.
- IT조선. (2022. 4. 13.). 「[메타버스날개단ESG] 지자체가ESG 행정외친이유는」.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041202102> (최종접속일: 2025. 5. 5.).
- 아주경제. (2022. 3. 6.). 「재계 넘어 기초자치제도 화두된 ESG..왜?」. <https://www.ajunews.com/view/20220304082159774> (최종접속일: 2025. 5. 5.).
- 이경한·김민준. (202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0 의 세부목표와 지표 실태 분석. 「교육종합연구」, 23(1): 217-242.
- 이도형. (2022). 무엇이 한국의 MZ 세대를 친환경제품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가?. 「e-비즈니스연구」, 23(3): 169-182.
-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1): 43-66.
- 이석환. (2024). 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8(1): 105-131.
- 이세규. (2024). ESG 복합지수와 영역별 ESG 지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17 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관리연구」, 19(4): 45-66.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이찬영·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이현진·김수진. (2023).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적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연구: Z 세대와 ESG 경영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6(8): 1345-1363.
- 임소현·장우윤·이태천. (202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유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3(3): 127-163.
- 임원혁·이세규. (2024). 복합 ESG 지수를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시계열적 ESG 변화양상에 관한 실증연구-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연구」, 56(2): 89-114.
- 임태경. (2021a).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성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8(3): 73-94.

- 임태경. (2021b). 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247-273.
- 임태경. (2022).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출구조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정보」, 19(3): 1-24.
- 임태경. (2023a).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수도권·비수도권·같은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 임태경. (2023b).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197-220.
- 임태경. (2024a).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5(1): 45-64.
- 임태경. (2024b).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8(4): 125-153.
- 자유기업원. (2021).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https://www.cfe.org/20210118\\_23418](https://www.cfe.org/20210118_23418) (최종접속일: 2025. 4. 10.).
- 전한택·윤영호·정진섭. (2024). 외식기업의 ESG 경영 활동이 기업 평판, 기업 이미지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루이싱 (luckin) 커피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21(6): 285-307.
- 정명재·유두호. (2023).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의 영향요인 연구: 경영 전략과 기관장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61(4): 117-149.
- 정예지·진우준·이재철. (2023). Z 세대의 가치관이 ESG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웰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6(4): 273-299.
- 정원희·박범준. (2024). 지방자치단체 정책 ESG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4(3): 315-338.
- 지현서·원제영·정현석. (2025).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가치, 기업이미지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30(1): 97-115.
- 차건환·임수하. (2023).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 「국토지리학회지」, 57(2): 111-128.
- 채원호. (2022). 지방자치단체 ESG 경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 분석. 「도시행정학보」, 35(4): 1-18.
- 최선·이정은. (2022). 지방정부 청년정책과 이주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이주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0(4): 155-180.

- 통계개발원. (2024).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KOSTAT통계플러스」, 2024(봄호): 50-63.
- 한국ESG평가원. (2023). 「2023년 지방자치단체ESG평가」.
- 한병훈·박정호. (2023). 지방자치단체 ESG 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3): 183-205.
- 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황은진·조상미·안지영. (2022). 공공기관의 ESG 와 조직성과: 기관장의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5(1): 133-163.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경영」. 경제로 세상 읽기, 2021(7).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74> (최종접속일: 2025. 5. 5.).
- Albuquerque, R., Koskinen, Y., and Zhang, C. (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risk: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Management science*, 65(10): 4451-4469.
- Aouadi, A. and Marsat, S. (2018). Do ESG controversies matter for firm value? Evidence from international dat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1: 1027-1047.
- Bagnoli, M., and Watts, S. G. (2003). Selling to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s: Competition and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12(3): 419-445.
- Dorflleitner, G., Utz, S., and Wimmer, M. (2018). Patience pays off—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long-term stock returns. *Journal of Sustainable Finance & Investment*, 8(2): 132-157.
- Fatemi, A., Glaum, M., and Kaiser, S. (2018). ESG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e moderating role of disclosure. *Global finance journal*, 38: 45-64.
- Giese, G., Lee, L. E., Melas, D., Nagy, Z., and Nishikawa, L. (2019). Foundations of ESG investing: How ESG affects equity valuation, risk, and performanc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45(5): 69-83.
- Meng-tao, C., Da-peng, Y., Wei-qi, Z., and Qi-jun, W. (2023). How does ESG disclosure improve stock liquidity for enterprises—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98: 106926.
- Mervelskemper, L. and Streit, D. (2017). Enhancing market valuation of ESG performance: is integrated reporting keeping its promise?.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6(4): 536-549.
- Qureshi, M. A., Kirkerud, S., Theresa, K., and Ahsan, T. (2020). The impac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disclosure and board

- diversity on firm value: The moderating role of industry sensitivity.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9(3): 1199-1214.
- Tarmuji, I., Maelah, R., and Tarmuji, N. H. (2016). The impac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actices (ESG) on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ESG scor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de, Economics and Finance*, 7(3): 67.
- Wong, J. B., and Zhang, Q. (2022). Stock market reactions to adverse ESG disclosure via media channels. *The British Accounting Review*, 54(1): 101045.
- Xu, H., Li, Y., Lin, W., and Wang, H. (2024). ESG and customer stability: a perspective based on external and internal supervision and reputation mechanism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1): 1-14.
- Yu, E. P. Y., Guo, C. Q., and Luu, B. V. (2018).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ransparency and firm value.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7(7): 987-1004.

---

김 경 현: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기업재무, 기업지배구조, 실증미시경제학 등이다(khyunkim@kmu.ac.kr).

서 성 민: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지역·도시경제학, 산업조직론, 실증미시경제학 등이다(econ21seo@kiet.re.kr).